

2차 공공기관 충청 흡수…호남권 고립에 국가균형발전 역행

충청권 혁신도시 추가에 '불편한 속내' 드러낸 광주시

행정도시·방사광가속기 이어…제2 수도권 블랙홀 우려

이용섭 시장 "공공기관 시즌2 광주·전남 공동 대처 필요"

정부·여당의 잇따른 '충청권 우대 정책'에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중심도시 세종시 조성 이후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는 충청도에 들어 정부는 전남을 제치고 1조원 규모의 오창 방사광가속기, 4조원대의 오송·충주 국가산업단지에 이어 대전·충남 혁신도시까지 안겨줬다. 이에 더해 국토균형발전,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을 이유로 수도권과 가까운 세종시에 정치·행정 기능을 보완하는 행정도수 완성에 나서고 있다.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경부축 우선 성장·발전 정책에 이어 충청권에 대한 국가 정책과 대규모 프로젝트의 집중은 호남권, 특히 수도권에서 가장 먼 광주·전남의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찬가지로 광주·전남이 공공기관 이전의 절 심함을 가지고 상생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 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 장과 전남지사의 만남과 협력화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5일 국가균형발전과 행정도수 완성을 위한 광주·전남 권역별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서 나선 이건철 전남관광재단 대표는 "대전·충남 혁신도시 자체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가까운 대전·충남 혁신도시를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표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정부 소속 및 공공기관 수는 수도권이 263곳(36%), 충청권 175곳(24%), 영남권 147곳(20%), 호남권 89곳(12%)으로, 호남권이 가장 열악한 처지다. 특히 충청권에는 지난 1973년부터 1992년까지 대덕연구단지가 조성되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등이, 1997년부터 오송생명과학단지가 들어서면서 식품 의약품안전청 등이, 2004년부터 신행정수도 세종시 건설로 19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입지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대전·충남은 지난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으나 지난 3월 국회에서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대전·충남도 혁신도시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어 대전·충남이 지난 7월 국토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고, 지난 8일 균형위에 상정돼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다만 균형위는 이전기관 규모, 구체적인 입지·면적 등은 향후 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별도로 결정한다는 의견을 첨부했다.

수도권·영남권 중심의 불균형 경제개발과 인구·자본 등의 지나친 집중, 이후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 중심의 국책사업 실시 등으로 인해 호남권, 특히 광주·전남만 고립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1970년대 까지 가장 높은 인구 비중을 보였던 호남은 50년간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등에 인구를 내주고, 경쟁력마저 쇠퇴해 좀처럼 반전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민원 광주대 교수(전 국가균형발전위 원장)는 "행정도수 완성은 제2의 중앙집중



이용섭 광주시장이 12일 오후 시청 접견실에서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을 접견하고 세계김치연구소의 독립적인 유지를 요청했다.

이용섭 광주시장

국가 과학기술위원회

원광연 이사장 만나

김치연구소 존치 요청

이용섭 광주시장이 12일 국가 과학기술위원회에 세계 김치연구소의 존치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을 방문한 원광연 국가 과학기술위원회 이사장과 면담하고 김치연구소를 한국식품연구원 분원으로 통합 추진하는 것을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광주 김치의 세계화와 직결된 문제"라며 "없는 것도 만들어야 할 상황에 있는 것을 없애는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김치연구소는 2010년 1월 설립돼 2012년 10월 광주에 정사를 준공해 경기 성남에서 이전했지만, 국회 등에서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거듭 받아 통합이 추진 중이다.

이 시장은 "김치연구소는 2016년까지 시스템을 갖추느라 일을 제대로 못 했고 그 이후에는 9개월간 소장을 임명하지 않기도 한 만큼 정부 책임도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노화 방지, 미용, 건강 증진 등 기능에 대한 과학적 뒷받침에 김치연구소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광주 지역 사회에서는 최근 시의회, 경실련 등이 통합 반대 성명을 내는 등 김치연구소 존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2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공항 활주로에서 제1전투비행단 소속 전투기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설과 지원 방안,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등이 담겼다.

자료를 받은 무안군과 해남군, 고흥군은 개봉하지 않고 자료를 즉각 반송했다. 무안과 해남은 공항 입지 적합성, 군사작전 적합성 검토를 거쳐 지난 2018년 이전 '적합' 판정이 내려졌으며, 고흥은 현재 작전 적합성 평가 결과가 진행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3 후보지로 급부상했다.

이들 기초단체는 모두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지역민 의견에 따라 자료 반송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며, 사업 설명자료 수령은 물론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영암군의 경우 군공항 이전사업 설명자료 접수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전동평 군수가 이날 실무부서에 자료 반송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격양된 이전 후보 기초단체와 달리 전남도는 비교적 차분한 표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방부와 광주시가 사업을 진척시키려고 한다면 전남 각 시군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군공항 이전 사업이 정부 책임 아래 추진 될 수 있도록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속도를 내거나 지역 주민들이 환영할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에 공을 들이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22개 시·군의 반응을 좀 더 기

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군공항이 전사업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광주군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해 전남 각 시·군에 제대로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며 "일부 기초단체의 반송 여부와 관계없이 1~2개월은 나

머지 시·군의 반응을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다.

군공항 이전 적합지역을 지역명 언급 없이 3곳으로 표기한 설명자료와 관련해선

"의도치 않게 고흥을 포함한 3곳으로 표기

됐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며 "고흥만 간척지에 대한 군사작전성 검토 결과는 긍정적이며 조만간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